

제2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12. 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12월 2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부위원장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5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18차부터 제20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9차부터 제21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18차부터 제20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9차부터 제21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91호 『금융감독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용역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9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법사금융 근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불법사금융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이때 불법사금융에 대해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그런데 한편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면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 제재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이 있는지?
- (보고자)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바 있음. 그 내용의 핵심이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집중단속이고, 두 번째가 광고차단, 세 번째가 피해구제, 네 번째가 제도개선이었음. 오늘 보고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대부업 개정안을 말씀드렸고, 집중단속에 있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해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그래서 상반기 대비 한 80% 이상의 단속증가가 일어난 상황이고, 현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2주마다 성과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불법대부업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이 성과를 모아서 중간중간 보도자료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3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감사인 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39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39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39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398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4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관련 대출규제의 내용을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내용.

○ (위원) 차주 단위 DSR 관련하여 별도로 분석이나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의 틀 안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지?

- (보고자) 지난 11월13일에 발표된 차주 단위 DSR 규제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로 시행을 하고 1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감독규정으로 규정화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됨. 차주 단위 DSR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내년 2~3월까지 초안을 마련할 예정임.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현재 틀 내에서 할지 아니면 현재 틀을 완화하고 다른 강화된 규제를 넣을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검토해서 내년 1분기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9호 『우리금융지주(주)의 아주저축은행(주) 손자회사 편입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우리금융지주(주)의 아주저축은행(주)에 대한 손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서 은행과 비은행간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든가, 총차입금 기준을 추가하면서 회사채나 CP를 포함하는 기준변경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금융권 간 회사채·CP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는지?

○ (보고자)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했었고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참고로 이번에 개정이 되면 3개 계열이 빠지고 6개 계열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음.

○ (위원) 이 제도를 변경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 (보고자) 주채무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 대비 회사채나 CP, 즉, 시장성 차입 비중이 2010년말 대비 한 40%였는데 64% 이상 증가를 해서 이러한 시장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1호 『(주)우리은행의 진흥기업(주)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 보유 특례기간 연장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 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우리은행의 진흥기업(주)에 대한 출자전환주식 보유 특례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2년 연장하면 2022년말이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재연장이 가능한지? 데드라인(deadline)을 갖고 있는 것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 (보고자) 법상 추가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위원) 그동안 특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특례기간의 또 다른 예외로써 2년간 연장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매각계획 같은 것들이 구속력 있는 계획은 아니겠으나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음.

○ (보고자) 이 지분에 대해 (주)우리은행에서 매각에 대한 시도도 있었고, 또 2년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2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

○ (위원) 검사실시가 2019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이 제재사실에 대한 통보가 언제 됐는지? 2019년 4월에 검사가 끝나서 검사결과를 정리하고 제재조치가 나왔을 텐데, 1년 반 이상 DMZ구간에 개인정보들이 평문으로 저장되는 형태가 시정이 되고 이 조치사항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제재가 확정되고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에 시정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2019년 검사 당시 지적이 되어서 3월에 바로 자체 조치는 완료된 상황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것은 2019년 8월경임.

○ (위원) 2019년 8월이라고 해도 거의 1년 반인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된 것인지?

○ (보고자) 보통 제재 안건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을 하는데 이 건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건으로 금감원 제재심을 거치는 건이 아님.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의견진술이나 이런 절차들을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해왔고 최근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해 옴.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3호 『루미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 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 고유·일임재산간 정보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루미너스투자자문(주)에 대해 과태료, 임원에 대해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부과하며,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예고된 처분은 ○○○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이고, 그 해임요구의 이유는 루미너스투자자문(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에 대한 주식 및 ▲▲▲(주)에 대한 주식이 거의 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상차손을 회계상 뒤늦게 반영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임. 이에 대한 제재로 ○○○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처분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처분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혹은 문책경고 등으로 감경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사유는 첫째 이러한 주식의 감손, 손상차손 발생이 ○○○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심화되었던 손실이고 ○○○ 대표이사는 취임 당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취임해서 뒤늦게 이를 발견하였고 발견하자마자 이를 회계에 반영하였다는 것임.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각 대표이사의 취임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한 바 있고 ○○○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를 받을 당시 제출하였던

사실확인서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음. 또한, 증빙자료 중에 제××기, 제××기, 제××기의 각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의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회계사무소의 보고서로써 ○○○ 대표이사가 이 손상차손을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하겠음. 지금 대표이사의 해임요구는 예고처분의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소정의 조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임. ○○○ 대표이사의 손상차손 회계 미반영이 악의적이지 않은 점 및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실소유주인데 ○○○ 대표이사를 해임하여 다른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되면 최대주주의 회사 책임경영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서 '대표이사 해임요구'보다 감경된 '직무정지'나 '경고'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를 양원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 회계연도 손상차손 발생 인식시점과 대표이사 취임 시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20××년 ×월에 회사에 취임했으며, 20××년 ×월말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였고, ○○○ 대표이사가 20××년 ×월, 20××년 ×월에 회계를 할 때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이를 회계에 반영했어야 되었는데 그 두 번에 대해 반영하지 않은 사안임.
- (위원) 루미너스투자자문(주)에 대해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지?

- (보고자) 감사의견을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내용을 통보할 예정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4호 『모놀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여 이행기간 내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주)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이 사건 예고처분은 당사 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이며, 그 주된 사유는 법령상 요구되는 최저자본 기준을 준수하라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20××년 ×월××일자 ‘적기시정조치 관련 경영개선계획 제출 안내’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임. 위 적기시정조치의 핵심 내용은 20××년 ×월××일까지 당사의 자본금을 경영상 최저영업자본액 이상으로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기타 경영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음. 위 명령조치

에서 요청하는 최소자본금액은 ××억 ×,×××만 원 정도로써 당사가 법령을 참조하여 회계상 계산한 최소자본금액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1차 당사자 의견서에서 당사는 20××년 ×월×일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실시한 ××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확충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청문 당시 최대주주 ●●●에 대한 당사 보유채권 ××억 원 정도가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자산에 불과하므로 이 ××억 원을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계상하여야 한다하여, 그 ××억 원 정도의 자본감소를 계상하면 당사의 자본금액이 ×.×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청문 종료 후 최대주주 ●●●에 대한 당사 보유채권의 회수에 매진한 결과, 지난주에 ●●●에 대한 채권 중 ×억 ×,×××만 원을 회수하였음. 이에 관한 증빙으로 최근에 제출한 의견서에 법인통장 사본 및 법인계좌의 잔액증명서, 그리고 회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이 사임하고 오늘 출석한 □□□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명자료로 첨부한바 있음. 이러한 최근의 일련의 회사보유 최대주주 ●●●에 대한 채권의 회수 과정을 통하여 청문회에서 예고되었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의 원인사실, 즉 회사자산 중 최대주주 ●●●에 대한 채권 ××억 원 정도가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산으로써 실가치가 거의 ×원에 불과하여 이 부분을 자본에서 감손처리해야 된다는 이러한 지적은 사실과 다름이 소명되어야 할 것임. 이런 점 이외에 기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舊경영진이 모두 퇴사하고 새로운 자본을 회사에 투입함과 아울러 그 투입한 新주주들이 새로운 경영진으로 다시 한

번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당사 회사가 다시 한 번 재기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

- (위원) 국보 전환사채와 상계하였던 ●●●의 미수금 등 채권이 ××월××일에 ●●●의 지분매각대금으로 회수입금이 됐다고 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 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진술인) 지난 ××월××일 ○○○○○○○○ 정기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음.
- (위원) 입금이 되어있다는 것이 미수금을 회수한 것인지 차입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 않은지?
- (진술인) 미수금을 회수한 것임.
- (위원) 그런데 미수금을 회수했다면 자산을 매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유주식이 압류가 걸려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지?
- (진술인) 매각 할 수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최소자기자본 미달 부분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적기시정조치의 원래 취지는 맞는데 이것은 ×년 이상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나온 것인데, “××월××일에 입금이 되어서 미수금을 다 회수했으니 최소자본은 넘긴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진술인 주장인데, 금감원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당 주식의 압류가 걸려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입금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을 것이고 주식을 매각했다면 매각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출되어 있는지?
- (보고자)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회사 쪽은 이것을 알게 되면 명의개서를 해줄 수 없음.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차입인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이것이 지분매각이 됐다면 최대주주가 변경이 된 것이니까 최대주주 지분인수자는 사전에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 (위원) 그때 실물 제출된 CB가 이번에 허위라는 것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그것이 전자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CB를 제출했었는데 그 CB는 저희가 확인 결과 소각된 CB였음.

○ (위원) 입금된 것을 또 확인한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경영개선명령을 하고, 유상증자 했다고 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실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실사를 해본 결과 이것이 발견된 것이지 않은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 입금된 것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 납입하는 형태인지를 따져보려면 또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겠음.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5호 『라임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06호 『라임자산운용(주)의 청산인 추천안』, 제407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08호 『(주)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09호 『(주)라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라임자산운용(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주)라움자산운용·(주)라쿤자산운용 등 4개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안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 준법감시인 ○○○ 전무입니다. 본건 제재와 관련해서 라임자산운용(주) 관련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증권사 관련 제재를 위한 증선위가 11월25일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논의가 필요해서 차기 증선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나왔음. 관련증권사 중 ☆☆☆☆☆(주)은 당사의 OEM펀드와 관련해서 핵심기관. 즉, 형식적 투자자로 나옴. 외부 법무법인 등의 말에 의하면 증선위에서 ☆☆☆☆☆(주)이 당사에 행한 지시 및 명령의 사실관계도 언급되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고 저희는 간접적으로 들었음. 따라서 당사는 핵심쟁점의 사실관계가 계속 논의예정인 것이 맞다면 저희 제재안의 최종확정도 같이 논의되거나 증권사의 제재사항 등이 모두 확정될 때 같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의견진술에 앞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진술인) 본건 제재안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대표이사 ◆◆◆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로 구성되어 있음. 우선, 회사에 대한 제재원인은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서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개 펀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투자자 라임자산운용(주) 또는 형식적인 투자자 ☆☆☆☆☆(주)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고 자전거래 금지회피를 위한 연계거래를 하면 아니됨에도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TRS

계약을 ☆☆☆☆☆(주)과 체결하고 주가하락으로 동펀드에서 담보금 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TRS 계약을 라임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라임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x호에 이전하였다가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x호로 다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임.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원인은 상기에 더하여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금지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임. 그러나 동건 제재조치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적정하지 못함. 첫째, 본건은 영업정지나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부과하면서도 주된 조치사유로 들고 있는 OEM펀드 운용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본건 제재조치안의 주요 원인인 당사가 설정한 펀드가 OEM펀드라는 것인데 펀드설정 과정에서 Deal을 가져온 증권사와 일정한 협의가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증권사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셋째,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타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모두 피의자로 전환되었으나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한 수사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가중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가중하는 등 제재의 정도가 형평에 반하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이하에서는 많은 이슈가 있으나 특히 OEM펀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로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이유를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막연히 ××개 펀드 전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주) 혹은 ☆☆☆☆☆(주)의 일상적인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각 펀드와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일상적 요청 또는 지시를 했는지, 즉, 언제 팔아라, 언제 사라고 지시한 것인지 하는 것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펀드는 통상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들이 펀드의 투자대상을 발굴해서 자산운용사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면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적법한 투자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펀드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투자자, 즉, 수익자를 모집하게 됨. 그래서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은 ☆☆☆☆☆(주)이 당사에 제안한 Deal을 보고 판단해서 참여했을 뿐, 금융감독원이 실질적 수익자라고 언급한 라임자산운용(주)으로부터 어떠한 매도·매수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감원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이 라임자산운용(주)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밝혀 주고 있지 않음.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과 라임자산운용(주)의 담당자와의 공모 또는 유착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며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가 아니라 계속 참고인의 지위로 유지되었음. 다만,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 금융감독원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막연히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또한 모두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 ☆☆☆☆☆(주)의 제안에 의해 펀드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근거로 OEM 펀드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으나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거래상대방과 최초 연락을 한 자는 Deal sourcing을 한 증권사이므로 자산운용사에서 증권사에 대해 거래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수익자가 라임자산운용(주)인 것을 회사가 인지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OEM펀드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임. 특히, 라임자산운용(주)은 당시 전문사모운용업체 ×위인 회사였으므로 라임자산운용(주)이 설정한 펀드가 당사가 설정한 펀드의 수익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위반이라고 보이는 어려움. 세 번째,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주) 측 담당자와 당사 관계자의 통화ja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OEM펀드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통화내용은 ☆☆☆☆☆(주)에서 거래조건을 라임자산운용(주) 측에 확인해 보라고 해서 통화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지점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당사가 전화를 한 것임. 이것이 만일 OEM펀드라면 거래조건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도 없이 라임자산운용(주)이나 ☆☆☆☆☆(주)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었을 뿐인데 당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 지시가 있었다면 Email, 카톡, 통화기록 등의 자료로 남아있을 텐데 이 자료들은 현재 제시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주)에 대한 형사 판결문 중 ◇◇◇◇ ×호 및 ×호가 소위 OEM펀드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을 근거로 OEM펀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 판결문에는 실제 영향력이 행사되어 펀드가 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라임자산운용(주) 쪽에서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회차 전

환사채를 ××회차 전환사채로 현물로 대용납입하려고 했으나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음. 이것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이 라임자산운용(주)으로부터 지시운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인 것임. 회사는 자전거래 금지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을 한 사실이 없음. ◇◇◇◇ ××호가 해지한 TRS 계약과 ×호가 신규 체결한 TRS 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고 ◇◇◇◇ ××호 TRS 계약 체결 및 해지 그 이후 ◇◇◇◇ ×호가 신규 TRS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 펀드별 운용전략에 따른 것일 뿐임.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의 경우 타 자산운용사와 달리 OEM펀드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주)과의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증거, 정황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타사의 경우 이미 공모증거가 나왔거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으나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은 검찰수사에서 소명을 잘 하여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전환된 타 자산운용사와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참고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을 상실하고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본건 제재조치안은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를 ‘문책경고’에서 1단계 가중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한 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경합가중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은 본건이 OEM펀드가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이것이 OEM펀드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OEM펀드 지적사항과 자전거래 등 OEM펀드 이외의 지적사항이 이 목적과 수단이 실질적으로 단일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위법행위라고 보아 경합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자의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가 포트코리아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감독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자산운용사에서 개별 펀드의 운용역이 별도로 정해진 상황에서는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개별 펀드 운용에 관여하기 어렵고 당시 행위자인 ■■■ 팀장이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의 등기이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상품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본건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행위자와 엄격한 감독·지휘 관계라고 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 제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도 펀드에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 현재 사후관리 및 자금회수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앞서 말씀드린 점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주)라움자산운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의 ○○○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제재근거의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제5호는 금감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투자자 OEM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 아니라 특정 투자자의 개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임. 그런데 금감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수익자로서 투자자인 라임자산운용(주) 또는 ☆☆☆☆☆(주)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을 받아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애당초 투자자 보호의 저해나 이해상충이 지적사항에서 문제되지 않음. 특히 이 사건 펀드 중 라움 ♠♠♠전문투자형사모신탁 ×호의 경우에는 라임펀드가 유일한 수익자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대해 투자신탁 해지 및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별도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유일한 투자자 요청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조항에 적용될 수 없고 하나의 행위를 이중으로 제재하는 것 또한 부당함.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는 구속요건상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사이에 별도의 이면계약 등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주)라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주)이나 ☆☆☆☆☆(주) 누구와도 이러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 그리고 일부 펀드에 대해 펀드운용에 관여한 사실이 부존재하거나 직접적인 설정·운용을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음.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주)라움자산운용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접 설정·운용한 펀드임. 그리고 이들 펀드를 포함해서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라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의 경우에는 라임자산운용(주)에서 펀드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같은 경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음. 지금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라는 펀드에 대해서는 최근 이루어진 ☆☆☆(주)의 증권선물위원회 재조사를 명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주)의 증선위 심의결과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기관에 대한 징계 양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금감원이 상정한 징계 양정은 (주)라움자산운용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과 ×건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최대 수준의 과태료인 4억 5,000만 원의 부과건의임. 이는 너무도가혹한 수준임. 지금 라임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안이 공론화 된 것은 저희 역시 잘 알고 있음. 그러나 동종 업계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힘을 모아 투자대상을 파악하고 그중 특정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정하는 일이 이처럼 징계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도저히 어려웠음. 예를 들어 은행들이 차주에게 거액을 대출하면서 신디케이트론을 취급하거나 보험회사들이 특정 위험을 공동인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굳이 이런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동종 자산운용사의 협업이 징계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정말 알지 못했음. 그리고 (주)라움자산운용은 라임펀드의 사

후관리,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및 라움 ♠♠♠ 전
 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는 이미 회수가 완료되었고, 라
 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는 사업권 매각을
 통해서 그리고 ♠♠♠♠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는 국제 중재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기하고 있음. 가시적
 인 성과도 상당히 많이 존재함. 부디, (주)라움자산운용의 기
 관제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징계 양정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지난 5년간 동종 제재사례
 는 두 건이 있었음. 모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관주의’
 로만 징계가 이루어졌음. 20××년 ×월××일 ■■■■■■■■■■
 ■■■에 대한 제재사례와 20××년 ××월××일 ■■■■■■■■■■
 ■■■에 대한 제재사례가 있었는데 이들 사례 모두 후순위
 투자자나 PF 대주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였는데 모두 ‘기관주의’로만 제재가 되었었음. 판매업자
 OEM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6호의 경우
 에도 저희가 지난 5년간 ×건의 제재사례를 확인했지만 ×
 건은 ‘기관주의’에 그쳤고, 나머지 × 건에 대해서도 제재내
 용이나 펀드 범위 그리고 피해금액에 있어서 (주)라움자산운
 용과는 큰 차이가 있었음. 이러한 (주)라움자산운용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하시어 비록 제
 재를 하는 경우에도 기관에 대한 양정을 ‘기관경고’로 낮추
 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 과태료 부과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지금 과태료예정금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금
 감원은 (주)라움자산운용에 대해 동기가 ‘상’에 해당하고 위반
 결과가 ‘중대’라고 보았음. 그래서 기준금액 5,000만 원에 대
 해서 9건의 건수를 그대로 곱하고 여기에 100%를 적용해서

4억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건의를 산정했음. 그러나 위반결과에 대해서 요구되는 언론방송이나 공표된 내용은 모두 라임자산운용(주)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지, (주)라움자산운용에 대한 것은 아님. 그리고 금융상품의 해지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초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반결과는 ‘경미’라고 보아야 됨. 그리고 위반동기에 대해서도 업계 × 위 자산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주)과 협업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펀드가 설정된 20××년 당시에 라임자산운용(주)을 의심할만한 상황도 없었고 이전에 유사한 제재사례나 자산운용사 간의 협업이 문제된 사례도 없었음. 그렇기 때문에 위반동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보아야 되고 (주)라움자산운용이 기울이고 있는 사후관리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동기는 ‘중’ 또는 ‘하’ 정도에 불과함. 그러므로 법정최고금액의 20% 내지 8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과태료예정금액이 산정되어야 함. 그리고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제2항 ‘다’목에 의하면 과태료 예정금액에서 감면사유는 적용되어서 과태료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되어야 됨. 그런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적인 감경사유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말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전 연도인 20××년 ××월××일 현재 (주)라움자산운용의 자본금은 ××억 원이고 자본총액은 ××억 ×,×××만 원 정도임.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은 ××억 원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액인 4억 5,000만 원에서 자본금 ××억 원의 ××%인 ×억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감경사유가 존재하기 때

문에 이 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들이 지난번 증선위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음. 우선, 동 안건은 지난 10월28일 증선위에서 원안의결된 안건임. 증권사와 관련된 쟁점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본건 운용사 제재의 경우에는 이것이 OEM펀드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증권사 조치에서 쟁점된 것은 그 OEM펀드 운용과정에서 증권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고 본건 OEM펀드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위원)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의 경우에는 자꾸 증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특징이 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주요 OEM펀드 투자현황이라고 해서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 ××개, (주)라움자산운용이 ×개, (주)라쿤자산운용 ×개에 대해 펀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적고 있음. 통상 펀드를 운용하려면 이 펀드설정과 관련해서 운용사는 어떤 기초자산을 담을 것인지 Deal Sourcing을 하고 펀드구조를 어떤 식으로 짤 것인지, 수익률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초자산을 얼마 가격에 언제 살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그런데 여기 편입된 자산들을 보면 (주)라임자산운용의 ◀◀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런 자산들이 실제로 다 불공정거래의 조사와 관련되거나 거래정지, 상장폐지된 내용들임. 그리고 우리가 펀드를 운용한다고 하면 자산을 매수하고 또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익자가 대부분 다 (주)라임자산운용 하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도 전부 한 번 밖에 매입 외에는 운용 내역이 없는 프로젝트 펀드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 또는 (주)라움자산운용과 관련된 운용역들이 검사과정이나 검찰진술과정에서 자기들은 다 (주)라임자산운용과 ☆☆☆☆☆(주)으로부터 이런 관련된 Deal Sourcing 구조들을 그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 하였음.

- (위원)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의 경우 검찰조사에서 피의자 전환이 되지 않았고 단순참고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펀드 운용관련자들에 대한 얘기이지 불공정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OEM펀드 설정 관련 자체가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설정 관련된 사람은 참고인 지위에 불과함.
- (위원) OEM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진술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의자 전환 여부는 행정제재 대상과 다른 것 인지?
- (보고자) 전혀 다른 건임.

- (위원) 제시된 OEM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E-mail 이 됐든, 진술이 됐든 구체적으로 다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 (보고자) 그러함. 상세입증자료를 보시면 건별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40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결과 보고』, 제41호 『2020.4월~2020.9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2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13분 폐회)